

민단계 재일조선인의 한국민주화운동

— 재일한국청년동맹을 중심으로 —

조기은*

〈차 례〉

1. 들어가며
2. '재일한국청년동맹'의 결성과 성격
3. 한청의 한국민주화운동
4. 나오며

[국문초록]

'재일한국청년동맹'(한청)은 원래 민단산하단체로 조직의 모체는 이승만 정권이 반공정책의 일환으로 조직한 '대한청년단'이다. 그 때문에 결성 당시부터 한국정부의 통제 하에 있던 단체였다.

그러나 4·19혁명과 5·16군사쿠데타를 겪는 과정에서 민단내의 저항세력으로 성장했다. 특히 5·16 군사쿠데타를 지지했던 민단집행부는 한국정부에 추종했으나 민단 내에는 군사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고, 그들은 민단을 통제하는 한국정부에 대해 주체적일 것을 요구하며 민단민주화운동을 전개했다. 한청은 그 저항세력이 결성한 '민단정상화 유지간담회'의 '실질적인 사무국'으로 활동하며 민단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동시에 법적지위와 외국인학교법안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단집행부를 비롯해 한국정부와도 대립하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1972년에 민단은 한청을 산하단체에서 취소하고 민단으로부터 배제했다.

그 후 같은 해에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자 한청은 다른 민단민주화운동세력과 남북공동성명을 지지하는 등 조국통일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민단민주화운동세력은 유신체제 후에

* 도쿄외국어대학 해외사정연구소 특별연구원

조국통일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고, 당시 일본에 체재하고 있던 김대중의 강연에 영향을 받아 한국민주화운동으로 방향을 돌린다. 한청은 민단체 재일조선인과 김대중이 '연대'해 결성한 한국민주화운동단체인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 국민회의 일본본부'(한민통)의 회원단체로 활동했다.

이후 한청은 독자적으로 운동을 전개하면서 한민통의 '행동대'로 한민통의 운동을 뒷받침했다. 한청은 4·19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활동했는데 주로 노동자와 재일조선인정치범 지원 운동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또한 80년대에 들어서 약화된 한민통을 지원하며 한민통 운동의 실천적인 부분을 많이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청은 70년대에 들어 시작된 개인이 중심이 되어 전개한 권리획득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지원했다.

한청은 전前 재일조선인정치범인 서승이 제기한 '적극적 민족주의'를 발전시켜 조국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가 되려는 의지를 담은 '건국·귀국사상'에 기반을 두고 문화활동을 통해 한국민주화운동을 전개했다. 이를 위해 한청은 조국의 문화와 역사, 한국의 정치·사회에 대한 학습, 그리고 '우리말'(한국어) 학습 등을 실시했다.

이러한 한청의 활동을 한국정부는 경계하고 견제했으며, 일본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한청을 탄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청은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국의 정세변화에 맞춰 적극적으로 행동했고, 그 일환으로 '민주화' 달성 후에는 조국통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주제어] 재일조선인, 한국민주화운동, 재일한국청년동맹, 민단민주화운동, 반공

1. 들어가며

본고에서는 재일조선인, 특히 민단체열의 청년단체 '재일한국청년동맹'(이하, 한청)의 한국민주화운동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한반도의 분단은 재일조선인사회에도 영향을 미쳐 한국을 지지하는 민단체와 북한을 지지하는 총련계로 '분단'되어있고, 항상 한반도의 정치와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로 인해 재일조선인은 조국의 정치적 상황과 분단 상황, 그리고 일본 정부와 사회의 차별이라는 이중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다. 특히 1961년의 5·16 군사쿠데타로 수립된 박정희 정권의 강력한 반공정책은 한국만이 아니라 재일조선인 사회에도 적용되었다. 그리고 분단된 재일조선인사회는 박정권에게 북한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으로 항상 경계의 대상이자 통제해야 할 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70년대에 일본에서 한국민주화운동을 전개한 민단체 재일조선인은 박정

회의 정적政敵이었던 김대중과 ‘연대’해 운동을 주도하고 해외 ‘한국인’들과 연대해 한국민주화운동을 규합했기 때문에 박 정권에게는 더욱 경계하고 억압해야 할 대상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대남 간첩활동의 증거이기도 하고, 민주화운동을 억압을 위해 이용할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도 했다. 일본에서 한국민주화운동을 주도한 것은 민단에서 배제당한 전 간부와 산하단체이다. 이들이 한국민주화운동을 전개한 원인遠因에는 민단민주화운동이 있었다. 민단민주화운동은 민단을 통제하는 한국 정부와 그를 추종하는 민단집행부에 대해 주체적인 조직이 될 것을 요구한 운동이다. 하지만 민단민주화운동을 주도한 민단 간부와 지방본부는 민단 산하단체를 취소당하고 민단에서 배제 당하게 된다. 그때 청년조직인 ‘재일한국청년동맹’(한청)도 함께 배제되었고, 그 후에 전 민단 소속이었던 배동호를 중심으로 한 1세대들이 중심이 되어 김대중과 ‘연대’해 1973년 8월 8일에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 국민회의 일본본부’(한민통)를 결성하게 되고 한청도 한민통의 구성멤버가 되어 일본 내의 한국민주화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한민통은 김대중의 구명운동과 한국민주화운동을 위해 일본 내의 여론을 형성하고, 세계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한국민주화운동을 하고 있었던 해외 ‘한국인’과의 ‘연대’를 통해 연합전선을 형성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이러한 한민통의 활동을 ‘행동대’가 되어 뒷받침한 것이 청년단체인 한청이다.

그러나 한청의 한국민주화운동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 졸론 『재일조선인과 1970년대 한국민주화운동』과 『한국민주화운동 참가로 보는 재일조선인의 정체성-민단계 재일조선인을 중심으로』¹⁾가 있다. 또한 한청 멤버로 활동했던 임무택의 『재일한국청년동맹의 역사-1960년대부터 80년까지』²⁾가 있다. 『재일조선인과 1970년대 한국민주화운동』은 민단에서 파생

1) 졸론 『재일조선인과 1970년대 한국민주화운동』과 『한국민주화운동 참가로 보는 재일조선인의 정체성-민단계 재일조선인을 중심으로』(『在日朝鮮人と1970年代の韓民主化運動』, 『言語・地域文化研究』(제12호, 東京外 国語大学大学院博士後期課程論叢, 2006년 3월); 『韓民主化運動への参加に見る在日朝鮮人のアイデンティティー-民団系在日朝鮮人を中心に』, 『言語・地域文化研究』(제17호, 東京外国語大学大学院博士後期課程 論叢, 2011년 10월)).

2) 임무택, 『재일한국청년동맹의 역사-1960년대부터 80년까지』(林茂澤, 『在日韓國青年同盟の歴史-1960年代 から80年まで』, 新幹社, 2011년).

된 단체들의 한국민주화운동을 개관했고, 『한국민주화운동 참가로 보는 재일조선인의 정체성-민단체 재일조선인을 중심으로』는 민단체 재일조선인의 한국민주화운동과 정체성에 관해 논한 것이다. 이들 논문은 한청과 그 운동을 개략적으로 소개한 것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연구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임무택의 연구는 자신의 경험과 60~80년대의 한청 기관지 등을 바탕으로 한청의 일상적인 활동과 운동에 관해 분석하고, 한청의 활동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서술했다. 그의 연구는 한청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정리한 것으로 그 가치가 높다. 단 한청의 한국민주화운동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아니며, 멤버인 민단체 재일조선인 2·3세가 어떠한 생각으로 한국민주화운동에 참가했는지와, 한국민주화운동에서 보이는 복잡한 정체성의 교착에 관한 면밀한 분석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재일조선인운동에 관한 연구는 총련이나 좌익 중심의 것이 많은데 비해 민단체 청년단체의 운동, 특히 한국민주화운동에 초점을 맞춘 것은 거의 없다. 본고에서는 민단체 청년단체인 한청이 어떠한 경위로 한국민주화운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한국민주화운동의 전사前史인 민단민주화운동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기로 하며, 한청 조직과 그 운동을 뒷받침한 사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한청의 운동에 반공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도 같이 보기로 한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재일조선인’이라는 호칭은 서경식의 정의³⁾를 따라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결과로 일본에 살게 된 조선인과 그 자손으로 정의하겠다. 재일조선인을 부르는 호칭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총련계를 가리키는 호칭), ‘재일코리안’ 등이 있는데, 이들 호칭은 한반도의 분단과 재일조선인사회의 ‘분단’이 투영된 호칭으로 이데올로기라는 선입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식민지 지배와 일본 사회의 차별이 잘 보이지 않는 호칭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식민지 지배의 결

3) 徐京植, 『半難民の位置から-戦後責任論争と在日朝鮮人』, 影書房, 2002, 153쪽.

과로 일본에 살며 차별받는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동시에 한반도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영향을 받고 있는 재일조선인의 입장을 상징하는 호칭으로 ‘민단계 재일조선인’이라는 호칭을 쓰겠다.

그러나 한국민주화운동을 전개한 민단계 재일조선인은 스스로를 ‘재일한국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민단 조직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재일조선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한국민주화운동을 전개한 민단계 재일조선인의 자기의식과의 사이에 간극을 만든다. 하지만 그 간극이 그들이 어떠한 생각과 입장으로 한국민주화운동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민단계 재일조선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2. ‘재일한국청년동맹’의 결성과 성격

1) 반공의 보루에서 저항 단체로

한청의 모태는 ‘대한청년단’이다. 재일조선인단체인 ‘조선건국촉진 청년동맹’(건청)이 해산한 다음 날인 1950년 8월 29일에 재일조선인청년으로 구성된 ‘대한청년단’이 결성되었다. ‘대한청년단’은 원래 이승만에 의해 결성된 청년조직으로 이승만에게 절대복종을 맹세한 이승만의 사적인 단체로서의 성격이 강하며,⁴⁾ 공산주의자 말살을 맹세할 정도로 철저한 ‘반공주의’에 입각한 단체이다.⁵⁾

4) 대한청년단은 1948년 12월 19일에 결성되어, 1953년 9월 10일에 해산되었다. 대한청년단은 이승만이 청년 단체 단일화를 지시해 대동청년단, 청년 조선총동맹, 국민회청년단, 대한독립청년단, 서북청년회 등 우익 청년단체 등을 통합해 조직한 단체이다. 대한청년단은 이승만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을 맹세한 이승만의 친위대와 같은 단체였다. 대한청년단의 조직구성은 다음과 같다. 총재에는 이승만, 단장에는 신성모, 부단장에는 이성주, 문봉제가 맡았다(이경남, 『靑年運動半世紀(55) - 大韓靑年團』 [1] 이대통령 親衛隊로 『統合기발』, 『京 鄉新聞』, 1987년 12월 2일, 9쪽).

5) 이승만은 1949년 4월 7일에 ‘대한청년단’의 행동강령을 발표했는데 그 주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반공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국민회와 함께 ‘일민주의’ 선전에 적극적으로 입하며 ‘반공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었다. 또한 남북통일과 ‘공산숙청’에 지장을 초래하

한국의 ‘대한청년단’이 조직된 후 미군의 철수가 확실시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반공이 강조되었고,⁶⁾ 한국의 이러한 상황이 재일조선인사회에서 반공을 실천하는 조직의 결성을 촉진했다. 1950년 3월에 육군 참모총장인 채병덕이 일본으로 건너가 민단에 ‘대한청년단’의 결성을 요청하는 등 청년 조직 결성에 관한 얘기가 진행되던 중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방위대’로서의 조직을 결성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대한청년단’이 결성되었다.⁷⁾ ‘대한청년단’은 이승만 정권의 반공의 보루로 조직되었고, 조직 후에는 중앙훈련소를 설치해 ‘반공 투사’를 양성하기 위한 연수회도 설치되었다.⁸⁾ 또한 민단과 대등한 발언권과 주체성을 가지고 있던 청년단체가 비주체적으로 바뀌며 민단의 산하단체 취급을 받게 되었다.⁹⁾

그 후 ‘대한청년단’은 한국의 ‘대한청년단’이 해산하자 한국과의 관계가 모호해지면서 그 존재 의의가 떨어져 조직은 침체하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조직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편으로 ‘재건대회’의 성격을 띤 ‘대한청년단’ 제3회 대회(1955년 9월 28일)를 개최하고 조직개편을 단행했다.¹⁰⁾

1958년 9월 30일에 열린 ‘대한청년단’의 제6회 정기대회에서 새 단장으로 선출된 곽동익은 1960년에 4·19혁명이 일어나자 같은 해 10월 9일에 열린 제8회 정기대회에서 조직의 명칭을 ‘재일한국청년동맹’(한청)으로 바꾸고 조직을 개편했다. 한청으로 조직 개편한 데에는 세 가지 의의가 있는데, 첫 번째로 4·19혁명의 “재일부대”로서 4·19혁명을 계승할 것을 표명한 것, 두

지 않도록 민중의 환영과 협조를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韓靑行動綱領 李總裁가 指示』, 『東亞日報』, 1949년 4월 12일, 1면). ‘일민주의’는 ‘하나의 국민’이 되어 공산주의를 배척할 것을 주장한 이승만의 이념으로 ‘대한청년단’은 ‘일민주의’에 근거해 반공을 실천하는 단체로 조직되었다고 할 수 있다.

- 6) 후지이 다케시, 『괴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 - 족청계의 형성과 몰락을 통해 본 해방 8년사』, 역사비평사, 2012, 229~230쪽.
- 7) 이경남, 『靑年運動半世紀(57) - 大韓靑年團[3] 후방治安담당 『防衛隊』로 변신』, 『京鄕新聞』, 1987년 12월 16일, 9쪽.
- 8) 민단 30년사 편찬위원회, 『민단 30년사』,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1977, 65쪽.
- 9) 정철봉, 『民團今昔 - 在日韓國人의民主化運動』, 啓衆新社, 1982, 300쪽.
- 10) 좌담회, 『60년대 한청동을 말한다』, 『계간 통일로』(座談會 『60年代韓靑同을語る』, 『季刊統一路』第28号、在日韓國靑年同盟、1980年12月、115頁); 재일한국청년동맹, 『재일한국청년동맹 결성 50주년 기념식』(在日 韓國靑年同盟 『在日韓國靑年同盟結成50周年記念式』、2010年12月、97頁). 참고로 재일한국청년동맹은 약칭으로 한청, 한청동 등이 쓰인다.

번째로 4·19혁명의 정신에 근거해 활동하면서 본국의 투쟁에 ‘연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 세 번째로 민단 산하의 청년조직이 본국과 민단의 통제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조직이 되려고 시도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¹¹⁾ 당시 한국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던 민단지행부는 4·19혁명에 자극 받아 본국 정부에 대해 주체적인 입장을 취할 것을 표명하는 등 본국 정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려고 했다. 이러한 민단내부의 변화가 ‘대한청년단’의 변화를 촉진시켰다고 할 수 있다.

한청으로의 조직개편은 재일조선인으로서의 입장을 다시 인식하는 전환점이 되었으며, 그 변화는 강령에서도 읽을 수 있다. ‘대한청년단’ 때에 채택된 강령 제1항부터 제3항은 1956년 10월 25일의 ‘대한청년단’의 제5회 대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① 조국의 완전한 통일독립, ② 민주주의의 바른 발전과 실천, ③ 진정한 세계평화 실현 등의 3항목으로 한국 ‘국민’으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그러나 한청으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추가 채택된 항목은 민족의식의 고양과 권익옹호였다.¹²⁾ 이 항목은 한청이 민족과 재일조선인으로서의 삶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한청의 인식전환의 배경에는 재일조선인 사회의 세대교체가 있었다. 그 시기는 재일조선인사회에서 2·3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났고, 그리고 자의적이건, 타의적이건 재일조선인의 ‘재일’이 점점 확실시 되어가는 시기였다. 이는 재일조선인과 조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사회와의 관계 또한 ‘재설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2) 민단민주화운동과 한청

한국 정부의 의도 하에 반공 거점으로 결성된 ‘대한청년단’의 후신인 한청은 당연히 한국 정부에 협조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4·19 혁명을 계기로 본국에 대한 민단의 태도 변화와 한청의 조직개편에 더해 민단민주화운동을

11) 좌담회, 『60년대 한청동을 말한다』, 위의 주, 117쪽.

12) 재일한국청년동맹, 『재일한국청년동맹 결성 50주년 기념식』, 2010년 12월, 40~41쪽.

거치며 한청은 저항세력으로 성장했고 민단집행부와 대립하게 되었다.

이승만 정권 하인 1949년에 주일대표부가 설치된 이후부터 민단과 민단을 통제하려는 주일대표부와와의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민단 집행부는 주일대표부의 비리 문제와 한국정부의 재일조선인 정책에 불만을 품고 ‘본국 정부 불신임안 선언’¹³⁾을 하기에 이르렀고 급기야 ‘제3선언문’¹⁴⁾을 발표했다. 이 ‘제3선언문’은 1960년 5월 26일에 열린 제25회 민단 전체대회에서 발표된 것으로 민단조직이 사상단체나 정치단체가 아니며, 본국 또는 해외의 어떠한 사상 또는 정치에 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단체임을 표명한 것이다. 나아가 한국 정부의 정책, 해외동포정책 및 대일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로 임할 것을 명백하게 나타냈다. 이는 민단이 본국 정부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추종하지 않으며, 주체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의사를 확실하게 나타낸 것으로 조직의 정체성을 재정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민단집행부의 태도가 바뀐 것은 1961년 5월 16일이었다. 이날은 한국에서 군사쿠데타가 있었던 날이자 민단에서 새로운 단장이 선출된 날이기도 했다. 새 단장이 된 권일을 비롯한 민단집행부는 박정희의 군사쿠데타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지만 민단 내부에서는 집행부의 지지 표명에 반발했고, 이는 후에 반군사정권, 반민단집행부, 반권일 운동으로 발전했다. 당시 민단간부이거나 전前 간부였던 김재화, 배동호 등의 1세가 ‘민단정상화유지간담회(民團正常化有志懇談會)’(유지간담회)를 결성해 이들 운동을 주도했다.

민단 내부의 갈등이 계속되던 중에 ‘녹음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1971년 3월 25일 민단 제34회 전체대회에서 새 단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단장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단장이 누구냐에 따라 민단의 성격이 바뀌고 동시에 민단과 한국 정부와의 관계가 정해지는 선거였다. 이 단장선거에 유지간담회가 지지하는 후보가 출마했고, 이 선거 자리에서 재일대사

13) 재일조선인의 북한으로의 귀국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던 민단 집행부는 1959년 6월 15일 날짜로 ‘재일교포’ 정책이 불충분한 것을 이유로 ‘본국정부 불신임안 선언’을 발표했다.

14) 민단50년사 편찬위원회, 『민단 50년사』,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 1997, 353쪽.

관의 김재권 공사가 유지간담회 멤버 중에 반국가적인 행위를 한 사람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당시 반국가적인 행위를 한 당사자로 지목된 배동호와 유지간담회는 이에 대해 반박 성명을 냈고, 유지간담회의 멤버들은 같은 해 5월에 ‘민단지주수호위원회’(자수위)를 결성해 민단집행부와 박 정권에 저항해 민단의 자주적 입장 견지와 민단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민단민주화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민단민주화운동이 이전부터 민단 내에 존재하고 있었던 파벌싸움과 얽히면서 민단집행부 및 주일대사관(박 정권)과 민단민주화운동세력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갔고 민단내부의 분열도 한층 심화되어 갔다.

한국정부는 민단의 분열이 심화되어가자 같은 해 11월 서울에서 민단 간부 50명을 대상으로 ‘북괴’의 재일조선인사회 침투에 대비한 ‘승공교육’을 실시했다.¹⁵⁾ 이와 같은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박 정권이 재일조선인 사회를 잠재적인 간첩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간주해 경계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 ‘혼란스런’ 민단의 상황을 해결하고 민단을 ‘개혁’하기 위해 민단간부와 주일대사가 함께 한국을 방문해 대통령과 외무장관을 면담하는 등 민단 내부의 상황을 안정시키려고 민단과 한국정부는 긴밀하게 접촉했다. 그러한 접촉의 결과였는지 모르겠으나 민단 내에 ‘민단조직정비위원회’가 발족되었는데, 이 위원회의 목적은 민단조직을 정비하고 “불순분자”를 배제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불순분자”는 민단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시의 민단집행부와 한국정부는 그들을 민단내부의 분열을 초래하는 북한의 간첩인 “불순분자”로 규정해 민단에서 배제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는 민단이나 한국정부의 지시나 정책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를 둘러싼 민단내부의 갈등과 대립이 반공 문제로 그 성질이 바뀐 것을 의미한다.

결국 민단민주화운동을 주도한 저항세력은 민단에서 배제되는데, 이때 한청도 민단에서 배제되었다. 그리고 민단에서 배제된 이들은 1973년 김대중과

15) 『民團간부초정教育』, 『京郷新聞』, 1971년 11월 22일, 1쪽.

‘연대’해 일본 내의 한국민주화운동을 주도하게 된다.

한청과 한국정부와의 대립은 ‘대한청년단’이 한청으로 개편했을 때부터 싹 트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청이 5·16군사쿠데타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박 정권은 물론 민단지도부와의 대립하게 되며 결국에는 민단은 1962년 4월 13일에 한청 위원장인 곽동의에게 정권처분을 내렸다. 이 외에도 민단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있던 또 하나의 청년단체인 제일 한국학생동맹(한학동)의 집행부에 대해서도 1961년 12월 11일에 정권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민단집행부의 처사에 대해 민단내부에서는 비판이 거졌으며, 나아가 민단 제28회 전체대회에서는 한청과 한학동 문제, 그리고 곽동의에 대한 정권처분 문제를 둘러싸고 민단 간부가 사의를 표명하는 사태로 발전했다.¹⁶⁾ 즉 한청에 대한 민단집행부의 강경한 태도는 오히려 민단내부의 갈등을 한층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한청과 민단 사이의 균열이 심화된 배경에는 60년대 한청이 전개한 운동이 있다. 60년대는 제일조선인사회가 한일조약 체결로 두 개의 큰 변화를 맞이하는 시대이기도 했다. 그 변화의 하나는 제일조선인의 법적지위가 정해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일조선인사회의 ‘분단’이 확실시된 것이다. 한일조약 중에 ‘제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은 제일조선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때 국적을 ‘한국’이라고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제일조선인사회는 한국적과 ‘조선적’으로 나뉘어져 눈에 보이지 않는 ‘분단선’이 형성된 것이다.¹⁷⁾ 또한 법적지위 문제는 일본에서의 제일조선인 권리와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60년대 한청 운동은 ‘법적지위 요구 관철투쟁’, ‘외국인학교법안 반대투쟁 및 출입국관리법안 반대투쟁’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한청의 법적지위나 외국인학교법안에 대한 반대운동은 한청과 민단 사이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였다. 처음에는 민단은 법

16) 민단50년사 편찬위원회, 『민단 50년사』, 앞의 주, 87쪽. 1962년 5월 21일~22일에 걸쳐 고베에서 열린 대회에서 고문인 정찬진과 김재화, 감찰위원장인 김급석이 사의를 표명하는 것으로 민단집행부에 대해 비판의 뜻을 보였다.

17) ‘제일한국인 법적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의 정식명칭은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 대우에 관한 협정’이다.

적지위와 관련해 “재류동포”에게 불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정부에 ‘진정단陳情團’을 보내는 등 강경한 태도를 취했지만 한일회담이 진행되면서 민단은 논의의 장에서 배제되어 갔고, 최종적으로는 한국정부에 협력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¹⁸⁾ 하지만 한청은 계속해서 반대하며 1964~65년에 걸쳐 ‘법적지위 요구 관철투쟁’을 전개했다. 민단은 민단의 방침과 다르게 단독행동을 하는 한청에 ‘제의사항提議事項’을 요구하는 등 통제하려고 했지만 한청은 계속해서 법적지위문제에 이의를 제기했다.¹⁹⁾ 또한 일본 정부가 1969년 ‘출입국관리령’ 개정안을 발표하자 유지간담회와 함께 이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한청의 한일회담과 일본정부의 재일조선인 관련 정책 반대운동은 기본적으로 한국정부의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당시 박 정권은 ‘반공실리론’을 내세워 총련계 학교에 대한 억압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일본의 외국인학교법안에 찬성했다.²⁰⁾ 한국정부 입장에서 한청의 반대운동은 결끄러운 것이었으므로 한청의 운동을 북한과 총련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구실을 붙여 억압했다. 예를 들면 ‘출입국관리령’ 개정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한청에 머물지 않고 민단 전체로 확대되어 가던 1969년 8월에 한국 정부는 서울에서 “재일거

18) 민단은 1964년 3월 27일에 한국에 ‘진정단’을 파견하고 법적지위문제에 관한 민단의 입장을 주장하는 등 주체적으로 대응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 다음해인 제7차 회담이 시작되고 나서 민단은 한국정부의 ‘법적지위 전문위원회’의 ‘고문’의 입장으로 바뀌었고, 최종적으로는 한일조약 체결에 협력하게 되었다(민단 30년사 편찬위원회, 『민단 30년사』, 재일본 대한민국 거주민단, 1977, 86쪽).

19) 민단은 한청과 한학동이 ‘제1차 한청·학동 법적지위·평화선 사수투쟁’(第1次韓靑·學同法的地位·平和線死守鬭爭)을 위해 대회 개최가 정해졌을 때, ‘제의사항’을 요구했다(『韓靑韓學同による法的地位要求貫徹 中央決起大會の経緯ならびに中央執行委員会の措置案』, 『韓國新聞縮刷版 - 1964~1969年度』, 在日本大韓 民国居留民団, 1965년 3월 1일 1면, 49頁). 민단이 제시한 ‘제의사항’은 ① 슬로건에 들어 있는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한일회담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항목을 제외할 것, ② 주일대표부에 항의하러 가는 대표자를 10명 이내로 할 것, ③ 제1항의 슬로건의 항목을 배제한다는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대신 “한일회담에 반대하는 조총련 세력을 분쇄하자”라는 항목을 넣을 것을 제외했다.

20) 재일한국인청년동맹, 『재일한국청년동맹 결성 50주년 기념식』, 앞의 주, 45쪽. 일본정부는 1966년 4월 ‘외국인학교법안’을 발표했을 때, 한국정부는 민단에 ‘외국인학교법안’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지 않도록 압력을 넣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폐교 대상이 되는 것은 총련계 민족학교이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한국정부의 입장은 ‘반공실리론’에 근거한 것이다(『재일 동포 그 격동의 현주소(4) 민족학교』, 『한겨레신문』, 1993년 6월 1일자, 13쪽).

류민단 강화대책회의”(1969년 8월 7~8일)를 열었고, 민단간부들도 이에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중앙정보부는 ‘출입국관리령’ 개정과 외국인학교법안 반대는 총련의 지시에 의한 운동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한국 정책에 따르도록 압력을 가했다.²¹⁾ 민단이 한청에 대해 정권처분과 직할처분을 내린 것은 한국 정부의 정치적 의향이 민단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한국정부의 의향에 반하는 반체제적이며 비판적인 의견이 민단 내에서 배제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청은 민단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고 유시간담회의 “실질적인 사무국”²²⁾으로서 민단민주화운동에 깊이 관여하며 반민단 입장에 서게 되었다.

민단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민단집행부와 저항세력의 갈등이 심화되는 와중에 한청은 ‘4·18사건’²³⁾에도 깊이 관여했고, 이에 민단은 1972년 4월 20일에 ‘4·18사건’에 관여한 유시간담회 멤버와 한청·한학동의 “범죄행위”를 비난하며 처단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청은 같은 달 23일에 ‘4월 혁명 12주년 재일한국인청년 중앙대회’를 개최하고 민단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위해 싸울 것을 표명했다.²⁴⁾

그러나 한청 내부에서는 일찍부터 한청의 민단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한청 중앙집행부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존재했다.²⁵⁾ 한청의 ‘정치화’는 민단이 한청에 더욱 압력을 가하는 이유가 되었다. 1972년 5월 2일에 한청 중앙집행부가 정치적으로 변하는 것에 반대하는 ‘한청 중앙집행

21) 정철, 『민단금석 - 재일한국인의 민주화운동』(鄭哲『民団今昔 - 在日韓国人の民主化運動』), 啓衆新社, 1982년, 188쪽.

22) 좌담회, 『60년대 한청동을 말한다』, 앞의 주, 120쪽.

23) ‘4·18사건’은 한청과 한학동 멤버 70명이 1972년 4월 18일에 민단민주화운동의 중심인물이었던 정재준, 배동호, 광동의 등과 함께 민단중앙본부를 점거하고 민단의 3기관장을 감금한 사건이다.

24) 임무택, 『선언문』, 앞의 책, 274쪽(원 자료 - 『4月革命20周年在日韓國青年中央大會』, 『韓國青年新聞』, 제82호).

25) 한청 아이치愛知본부의 위원장이었던 김가수金佳秀는 입관법 반대운동을 하면서 주일대사관 등에서 데모를 하지는 집행부의 요청에 대해 아이치본부가 집행부의 정치성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데모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회고하고 있다(金佳秀, 『我が青春グラフィティ②』(激闘編) - 『愛知韓青の精神』(いまも胸で光る), 『アプロ21』, 제5월호, 1997년 5월, 19쪽과 22~23쪽). 이는 일찍부터 한청 안에서 한청 집행부의 활동이 정치성을 띠고 있다고 인식하고, 그에 거부감을 갖는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무택林茂澤은 한청운동에서 한청 집행부와 한청 아이치본부와의 갈등을 “정치노선”과 “문화 노선”의 차이라고 보고 있다(임무택, 앞의 책, 172쪽).

부 난동 규탄대회'가 민단에서 열렸고,²⁶⁾ 이 대회에서 '한청 쇄신 행동위원회'가 결성되어 '한청 집행부 및 민단도쿄본부 집행부에 대한 항의문'을 채택하며 반한청집행부 운동을 전개했다.

같은 해 5월 29일에 민단의 '전국 지방본부 단장회의'에서 한청은 민단 도쿄본부와 함께 "민단의 와해와 파괴를 기도하는 불순분자"라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²⁷⁾ 즉, 한청의 반 민단적인 행위는 민단의 와해를 꾀하는 북한과 총련의 계획에 의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결국에 민단은 제20회 중앙위원회(1972.7.7.)에서 한청의 산하단체 지위를 해제했다. 이때 한청 중앙본부와 뜻을 같이한 한청 조직은 도쿄·사이타마·도치기·시즈오카·나가노·아이치·오사카·교토·효고·미에·히로시마·센다이·홋카이도 등의 지방본부이다. 이들 지방본부는 이후 한청 중앙본부가 주도한 한국의 사회적 문제를 그린 연극과 영화의 상연운동,²⁸⁾ 각종 집회와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일본 내의 한국민주화운동에 대한 여론형성을 위해 활동했다.

민단은 한청을 산하단체에서 해제하기 전인 1971년부터 한청의 각 지부에 한청과는 별도의 청년조직을 결성할 것을 요구했다.²⁹⁾ 그 결과 한청이 산하단체를 해제당한 후 민단에 순종적이며, 한청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인 '재일한국청년회'(이하, 청년회)가 결성되었다.³⁰⁾ 또한 민단은 한청 규탄 대회가 있기 한 달 전인 1972년 4월에 일찍이 "적성단체"로 규정했던 "한국 민족자주통일동맹 청년단체"(한민자청)에 대해 그 규정을 해제했다. 한민자청은 "한국민족자주통일동맹 일본본부"(한민자통)의 청년단체로 민단이 한

26) 재일본대한민국청년회 아이치현 지방본부(청년회), 건청建靑 / 대한청년단 / 한청, 『民団あいち 60年史』, <http://mindan-aichi.org/test/60nensi/3-2.pdf>(2014년 7월 20일 열람).

27) 정철, 앞의 책, 131쪽.

28) 『한청이 연속집회』, 『민족시보 추쇄판』(1980년 7월 15일(3편), 973쪽); 『재일한국청년동맹 결성 50주년 기념식』(앞의 주, 51~52쪽), 『선구』(『先驅』第3号、在日韓國青年同盟中央本部常任委員会, 1975년 12월, 5쪽).

29) 임부택, "성명 '청년회책동을 그만두라'", 앞의 책, 281~283쪽(원자료 - 『성명 '청년회 책동을 그만두라』, 『한국청년신문』(『声明「青年会策動をやめよ」』, 『韓國青年新聞』, 제95호).

30) 한청의 민단산하단체가 해제된 후에 전前 한청 히로시마본부에서 처음으로 청년회가 결성되었다. 그러나 한청의 모든 지부에서 처음부터 청년회가 결성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한청 아이치현에서는 '화랑회'가 결성되어 1975년 5월 18일에 '재일본대한민국청년회 아이치지방본부'로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 (<http://mindan-aichi.org/test/60nensi/3-2.pdf>).

일조약을 전면적으로 반대한 한민자통을 “적대진영을 이롭게 하”는 단체라며 적성단체로 규정했을 때 함께 적성단체로 규정된 단체이다. 즉, 민단은 한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민자통에 대한 규정을 해제한 것이다. 전 한청 멤버였던 이상호에 의하면 청년회에는 한민자청에서 활동하던 청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한민자청에서 활동하던 청년들이 한청 지부에 침투해 조직을 와해시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³¹⁾ 이와 같이 민단집행부는 한청 내의 비저항세력과 한민자청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한청의 저항세력을 견제하고 민단에 유리한 청년단체를 조직하게 해 한청의 분열을 심화시켰다.

위와 같이 청년단체가 민단분열에 깊이 관여해 가는 배경에는 민단 간부가 한청 위원장을 겸임하거나, 아이치愛知 한청의 경우처럼 한청의 간부가 민단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³²⁾ 민단 간부가 한청의 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은 민단의 의향이 한청에 반영되기 쉬운 환경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한청 출신이 민단에서 활동하는 것은 한청이 민단내의 활동가를 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한청과 민단의 밀접한 관계는 민단의 분열이 한청의 분열로 확대되기 쉬운 요인의 하나였다고 본다.

한청은 민단민주화운동에서 유년간담회와 ‘민단지주수호위원회’(자수위)³³⁾를 뒷받침했는데, 민단 산하단체를 해제당한 것을 계기로 한국민주화운동으로 전환하며 한민통의 조직적인 기반이 되어 그들의 운동을 뒷받침하게 되었다. 즉 민단이 한청을 배제한 것은 조직력이 있는 청년조직까지 반민단·반체제의 입장으로 돌아서게 해 저항세력의 운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결과가 된 것이다.

31) 전 한청 멤버인 이상호 씨와는 2018년 2월 7일 도쿄 신주쿠에 있는 커피숍에서 인터뷰를 했다.

32) 좌담회, 『60년대 한청동을 말한다』, 앞의 주(117쪽); 김가수, 『我が青春グラフィティ② 〈激闘編〉 - 『愛知 韓青の精神はいまも胸で光る』, 앞의 주(23쪽).

33) ‘민단지주수호위원회’는 ‘녹음사건’을 계기로 주일대사관이 민단을 통제하는 행위 등으로부터 민단의 주체성을 지키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1971년 5월 15일에 결성된 조직이다. ‘녹음사건’은 민단 제 34회 전체대회에서 새 단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주일대사관의 공사가 유년간담회 멤버 중에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발언해 유년간담회 멤버는 단장 선거에서 떨어지고 유년간담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3. 한청의 한국민주화운동

1) 70년대의 한청운동

한청이 한국민주화운동에 참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조국통일 운동이다. 1972년 7월에 발표된 남북공동성명은 재일조선인사회에 조국통일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안겨주어 공동성명을 지지하는 여론이 크게 일어났다. 한청을 비롯한 민단민주화운동세력도 예외는 아니어서 성명이 발표된 사흘 뒤인 7일에 한청, 자수위, 한학동은 남북공동성명을 지지하는 ‘성명 지지 환영대회’를 공동 주최했다. 그러나 이날은 한청이 민단으로부터 산하단체를 해체당해 민단에서 배제된 날이기도 하다.³⁴⁾ 이후 민단민주화운동세력은 총련의 산하단체와 공동 집회를 여는 등 총련계 재일조선인과 함께 지지운동을 벌였다. 같은 달 23일에 민단 오타大田지부는 총련 오타지부와 공동집회를 열었고, 8월에는 한청이 재일본조선청년동맹(조청)과 공동으로 도쿄에서 성명 지지대회를 개최했다.³⁵⁾ 단 이러한 움직임은 민단에서 제외된 뒤의 활동이기 때문에 민단과 총련 두 단체 간의 공식적인 활동으로 볼 수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지지운동이 재일조선인사회 전체의 움직임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박정희정권이 유신체제로 돌입하면서 이러한 조국통일에 대한 기대는 깨져버렸다. 민단 민주화세력은 박정희 정권이 존재하는 한 조국통일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한국민주화운동으로 눈을 돌렸고, 한청도 이러한 흐름을 따라 1972년 10월 22일 전국간부대회에서 한국민주화운동 및 조국통일, 재일조선인의 권익옹호를 중심으로 활동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한국민주화운동에 뛰어들게 된다. 이러한 한청을 포함한 민단민주화세력의 변화에 박차를 가한 것은 김대중의 강연이었다. 김대중은 1972년과 1973년에 열린

34) 『새로운 지도력의 확립』, 『민단 50년사』, 앞의 주, 110쪽.

35) 한청은 조청과 8월7일 도쿄에서 공동주최로 성명 지지대회를 개최했다(재일한국청년동맹, 『재일한국청년동맹 결성 50돌 기념식』, 2010년 12월 5일, 49쪽).

한청의 동계강습회에서 두 차례 특별강연을 했는데,³⁶⁾ 그 내용은 조국통일과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한국민주화가 중요하며 박 정권을 타도하지는 내용이었다.³⁷⁾ 이 강연은 한청뿐만 아니라 민단체재일조선인 단체가 한국의 민주화를 인식하고, 운동을 전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1973년 8월 13일에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 국민회의 일본본부(한민통)가 결성되었는데 한청은 한국민주화운동에 참가하는 민단체 재일조선인 단체인 ‘6단체협의회’ 멤버로서 한민통 결성에 관여하고 본격적으로 한국민주화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³⁸⁾

그 후 한청은 한민통의 구성멤버로 운동의 큰 흐름은 한민통의 운동방침에 따르면서 기본적으로는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한청은 일찍이 한국민주화운동과 재일조선인 권익옹호에 방침을 둔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1974년에 ‘6대 방침’을 발표하면서 조직의 기본 방침을 재정립했다. 한청이 발표한 ‘6대방침’은 앞의 방침에 더해 조국통일, 국제연대, 재일조선인의 민주민족운동 강화와 민단민주화, 한청 조직의 강화를 추가목표로 정했다.³⁹⁾

하지만 한청의 운동은 한국민주화운동이 중심이 된 상황에서 조국통일과 민단민주화를 위한 운동은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치며 구호만으로 끝나버렸다. 왜냐하면 민단민주화운동은 민단이라는 조직 내에서 가능했던 운동으로 민단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활동 공간을 잃어버렸고, 현실적으로 효력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국통일운동은 민단체 재일조선인운동의 최종목표였

36) 김대중이 특별강연을 한 동계학습회는 제8회 (1972년 2월 12일), 제9회 (1973년 2월 18일) 동계학습회였다(재일한국청년동맹, 『재일한국청년동맹 결성 50주년 기념식』, 앞의 주, 50쪽).

37) 『韓國の民主主義と統一の展望』, 『民族時報縮刷版』, 1973년 4월 1일자(2~4면), 36~38쪽.

38) ‘6단체협의회’는 1973년 2월에 결성된 조직으로 70년대 한국민주화운동을 주도한 한민통의 토대가 된 조직이다. 이 협의회는 조국통일을 위해 조직된 민족통일협의회, 민단민주화운동을 위해 결성된 민단 자주수호위원회, 전 민단 산하단체로 민단에서 배제된 후 한국민주화운동에 참가한 민단도교본부·민단가나가와본부·대한부인회 도교본부 및 한청 등이 참가했다.

39) ‘6대 방침’은 ①반통일·반민주·매족買族의 박독제를 타도하고 민주정권을 수립, ②반통일 분단 고정화 책동을 분쇄하고 조국의 지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고, ③제일한국인의 제반 권익을 옹호하고 일본의 신식 민주주의의 침략을 반대하고, ④일본국민을 비롯한 아시아와 세계각국의 민중과의 국제연대를 강화하고, ⑤한 민통을 중심으로한 제일한국인 민주민족운동을 강화하고 유신 어용 민단을 붕괴시키고, ⑥강대한 동맹을 건설하기 등이다(『反獨裁闘争は勝利段階に』, 『民族時報縮刷版』, 1976년 12월 15일자(3면), 497쪽; 재일 한국청년동맹, 『재일한국청년동맹 결성 50주년 기념식』, 앞의 주, 101쪽).

지만 이 또한 현실적인 운동이 되지 못했다. 그 배경에는 한국이 유신체제로 들어가며 재일조선인사회의 조국통일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것, 그리고 이후 한국 내에서 민간이 조국통일을 거론하기 어렵게 된 현실적인 상황이 있었다. 그리고 재일조선인의 조국통일운동이 한국과 북한의 관계나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국통일운동은 구호로 끝나버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청을 비롯한 민단계 재일조선인 단체가 재일조선인 사회에서 조국통일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한 점도 있다. 앞서서도 말했듯이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후 총련계 단체들과 공동집회를 여는 등 조국통일을 지지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다. 하지만 한국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총련계 단체와 함께 행동하려는 시도는 전혀 없었다. 그 주요 요인은 김대중과의 ‘연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대중은 민단계 재일조선인과의 ‘연대’를 위해 3원칙을 제시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공산주의와 선을 긋는’ 것이었다.⁴⁰⁾ 이 3원칙을 수용하고 김대중과 ‘연대’한 민단계 재일조선인은 총련계 단체와 ‘공식적인’ 활동을 같이 하지 않았고, 한청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한민통과 총련 관계자들 사이에 비공식적인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이는 재일조선인사회가 갖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다. 재일조선인사회는 민단계와 총련계의 재일조선인이 공존하는 사회이므로 이데올로기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서로 다른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게다가 같은 민족으로서 일본사회의 차별, 조국통일 등의 문제를 공유하는 사회이다. 그런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할 가능성 또한 갖고 있는 사회이기도 하다. 이

40) 김대중은 민단계 재일조선인과 ‘연대’를 하기 전에 조직결성 3원칙을 요구조건으로 제시했다. ①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을 견지한다, ② 반독재운동은 반정부운동으로 반국가활동이어서는 안 된다, ③ 공산주의와는 선을 긋는다 등이었다. 이 3원칙은 1973년 8월 4일 민단민주화운동 세력인 배동호, 김재화, 정재준, 조환준 등과 비밀회합을 갖고 조직결성에 관해 논의할 때 제시된 것이다(『金大中先生と韓民統との関係について - 韓民統常務委員会』, 『民族時報縮刷版』, 1980년 10월 1일付, 1002頁(2面)).

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교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북한 및 총련과 정치적인 관계에 있었고, 나아가 간첩행위를 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일조선인사회는 단순히 이데올로기나 정치적인 측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민단계 재일조선인에게 있어 총련계 재일조선인은 조국통일을 위해 서로 협력했고, 또 협력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민주화운동을 주도한 세력들, 특히 한민통은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이나,⁴¹⁾ 반공의 입장에서서 총련을 적대시하지 않았다. 이런 점이 한민통을 중심으로 한 민단계 재일조선인 운동세력의 ‘사상’에 의문을 제기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민단계 재일조선인이 김대중과의 ‘연대’를 계기로 본격적인 한국민주화운동을 추진했지만 김대중과의 ‘약속’에 묶여 재일조선인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총련계 단체와의 ‘연대’를 지속시키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물론 한청도 한민통과 다르지 않았고, 한민통을 구성하는 단체로서 한민통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의 한계가 되었다.

한청의 70년대 운동은 주로 반체제운동, 재일조선인정치범 구원 운동, 한국의 노동운동 지원, 일본의 오염산업의 대처 한국 수출을 규탄하는 운동, 재일조선인 권익옹호운동을 중심으로 전개했다. 이러한 운동들은 집회, 데모, 대회 등의 형태였지만, 한청 운동의 특징은 문화적인 요소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한청은 “정치와 문화의 일체화”를 구호로 연극이나 영화의 제작·상연 활동의 형태로 운동을 전개했다. “정치와 문화의 일체화”는 연극 제작이나 상연 등의 문화활동을 통해 한국의 정치적·사회적 상황을 알려 한국 민주화운동에 대한 일본사회의 여론을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이었다. 한민통이 주로 자금제공이나 기획을 담당하고 한청은 멤버들이 출연자가 되는 등 제작 현장에 참여하며, 제작 후에는 상연 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상영운동은 앞에서 서술한 한청의 지역 본부들이 중심이 되었다. 그 대표적인 작품

41) 민단계 재일조선인 단체인 한민통이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대표적으로 재일조선인 학자인 윤건차는 한민통이 북한의 사회나 정치정세에 관해 일인반구의 비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尹健次, 『日韓條約の締結と總連・民団の対立、そして在日二世の葛藤』, 『人文学研究所報』 Vol53, 神奈川大学人文学研究所, 2015년 3월, 27쪽).

이 연극 ‘진오귀’와 전태일의 일생을 그린 영화 ‘어머니’이다.⁴²⁾ 이러한 운동은 한청 멤버들이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과 역사, 문화 등을 학습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어를 학습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한국민주화운동은 한국에 대한 학습과 자신의 뿌리를 찾는 계기가 되었다.

한청은 80년대에 들어 한민통 운동이 약화되자 한민통 운동의 실천적인 부분을 많이 떠맡게 되면서 독자적인 활동보다 한민통과 함께 운동을 전개하며 집회 등을 공동주최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이는 한청 조직의 확대와 결속력 강화 등으로 이어졌고, 그를 위해 조직 내의 학습강화와 간부 활동가의 육성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⁴³⁾

한청은 조직력과 2·3세가 중심인 멤버의 활동이 밑바탕이 되어 민단민주화운동과 한국민주화운동에서 한민통의 ‘행동대’로 전면에 나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때문일까? 한청은 스스로가 일본에서의 한국민주화운동을 주도했으며, 한민통과 ‘민주민족통일 해외한국인연합’(한민련)⁴⁴⁾의 결성을 이끌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한청이 스스로의 운동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⁴⁵⁾ 한민통 관련 자료를 보면 한민통의 중심세력인 1세는 주로 운동기획, 활동자금 마련과 해외에 주재·체재하고 있던 ‘한국인’과의 ‘연대’⁴⁶⁾ 등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을 주

42) 『진오귀』는 김지하가 1973년에 쓴 희곡으로 한국 농민의 빈곤을 그린 작품으로 1974년 12월에 처음으로 상연된 후 1975년까지 상연됐다. ‘어머니’는 한국의 『전태일 평전』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1978년 11월 13일 도쿄에서 처음 상영됐다.

43) 한청은 1981년 10월 10일~11일에 개최한 ‘전국지부 활동가 경험 교류집회’에서 학습강화와 간부 활동가의 육성, 그리고 ‘재일한국인’ 청년 운동론의 확립 등이 강조되었다(『韓靑全國支部交流集會開く—『日常活動の充実と幹部の育成を』』, 『民族時報縮刷版』, 1981년 10월 21일(3면)、1123頁).

44) ‘민주민족통일 해외한국인연합’은 한민통과 미국, 서독, 프랑스 등에서 한국민주화운동을 하던 해외 ‘한국인’들이 연합해 만든 조직으로 1977년 8월 13일 일본 도쿄에서 결성되었다. 결성을 주도한 주요 인물로 배동호, 임창영, 윤이상, 이영빈 등이 있다.

45) 한청은 “해외동포의 민주기지인 한민통·한민련을 낳았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당시의 한청 운동에 대한 자부심을 엿볼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特集・韓靑の20年の歩み』, 『統一路』第28号、在日朝鮮人 青年同盟、1980년 12월、107頁).

46) 민단민주화운동과 한국민주화운동은 전 민단간부나 1세가 중심이 됐다. 그 중심에 배동호가 있는데, 그는 한민통 의장을 역임했으며 민단민주화운동, 김대중과 해외 ‘한국인’과의 ‘연대’를 주도한 인물이다.

도했고, 한청은 한민통의 의사결정을 실행했다. 즉 ‘행동대’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전 한민통 관계자는 “한민통의 운동은 1세가 ‘실천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한청은 한민통의 ‘행동부대’로서 운동을 추진했다”고 평가하고 있다.⁴⁷⁾ 전 한민통 관계자가 말한 ‘실천적인 부분’은 한민통이 기획한 집회 등의 개최나 연극·영화 상영 등의 운동 현장에서의 인적 동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상연운동이나 집회 등에서 한청의 인적 동원력은 한민통보다 우세했는데 이는 많은 지방조직과 멤버들을 갖고 있어 가능한 것이었다. 실제로 이러한 부분을 보면 전 한민통 관계자의 평가는 타당하다.

2) 한청운동의 중심 사상

한청은 앞에서 서술했듯이 그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국민주화운동에서 큰 역할을 해냈다. 그러한 한청의 조직력과 활동을 뒷받침한 것은 4·19혁명 정신과 ‘건국·귀국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한청은 한국민주화운동을 하기 전부터 4·19혁명 정신을 조직의 기본 정신으로 삼았다. 한청은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이에 반대했고, 같은 해 7월 6일에는 “민정기관 요구 성명”을 발표하며 군사정권에 퇴진을 요구했다.⁴⁸⁾ 이 성명은 박정희가 이끄는 정권에 대한 첫 저항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저항을 가능하게 했던 배경에는 4·19혁명이 있었다. 한청은 스스로를 “4월 혁명의 이념을 자신들의 이념으로 삼고 그 이념을 실천해 가는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⁴⁹⁾ 그러므로 “민정기관 요구 성명”은 4·19혁명을 완성시키겠다는 한청의 염원을 담은 것이었고, 나아가 그것을 실천한 첫 움직임이었다.

또한 일본에서 4·19혁명을 지지하고, 나아가 4·19혁명 정신을 계승함과 함께 반봉건·반외세·반독재·반매관(반매관 자본)을 주장하는 “4반 이념”의 실현을 지향하는 것을 조직활동의 이념으로 삼았다.⁵⁰⁾ “4반 이념”

47) 전 한민통 관계자는 한민통 조직에서 활동한 사람으로 이니셜 표기도 강하게 거부할 정도로 익명을 요구했다(인터뷰 날짜: 2014년 7월 22일, 장소: 신주쿠, 커피숍).

48) 제일한국청년동맹, 『제일한국청년동맹 결성50주년 기념식』, 앞의 주, 41쪽.

49) 위의 주.

은 서울대 학생운동세력이 발표한 제2선언문에 실린 반봉건·반외세·반매관의 ‘3반 이념’⁵¹⁾에 반독재를 추가해 만든 이념이다. 4·19혁명이 일어난 당시의 한국은 미국의 원조 감소로 폐업하는 공장이 많아지며 실업자가 증가한 데 더해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위기상태에 빠져 있었고,⁵²⁾ 이러한 경제적·사회적 상황을 배경으로 학생운동 측이 제기한 이념이었다. 한청이 ‘4반 이념’을 내건 것은 70년대의 한국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이 4·19혁명 당시와 그다지 다르지 않다고 인식했다는 것을 말한다. 결국 1970년 4월 19일에 ‘4반 이념’을 내걸고 재일조선인의 민권옹호와 조국통일·독립을 위해 비민주세력과 싸울 것을 표명하기에 이른다.⁵³⁾

4·19혁명 정신은 한국민주화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4월의 젊은 사자 운동”으로 발현됐다. “4월의 젊은 사자 운동”은 1975년 8월 31일에 열린 제17일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젊은 사자’는 4·19혁명 때 투쟁한 학생들을 가리킨다. 이 중앙위원회에서 “세우자! 민주해방의 새 나라를!”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4·19혁명을 계승 발전시킬 것을 표명하고,⁵⁴⁾ “4월의 젊은 사자 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정했는데, 이 운동은 한청의 멤버들이 조직 활동에서 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4·19혁명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모든 행동, 동맹생활, 그리고 일반생활에 이르기까지 4월 혁명 정신을 계승해 전 인격을 걸고 자신을 혁신해 가”는 것으로 “지부 일상 활동”을 강화하는 운동이기도 했다.⁵⁵⁾ “지부 일상 활동”은 “4월의 젊은 사자가 되자·찾자·만들자”라는 구호 아래 민족적으로 사는 것은 물론 한국민주화

50) 한동철, 『한청동 20년의 발걸음-70년대를 중심으로』 (韓東哲, 『韓靑同二十年の歩み-70年代を中心に』), 앞의 주, 99~100쪽.

51) ‘3반 이념’은 4·19혁명 1주년을 맞아 서울대 학생운동세력이 발표한 제2선언문에서 4·19혁명은 반봉건·반외세·반매관의 ‘3반 이념’을 지향한다고 표명했다(김선주·강석승 편저, 『4월 학생민주혁명』, 지식과 교양, 2013년, 317쪽).

52) 박세길, 『다시쓰는 한국현대사2-종전부터 10·26까지』, 돌베개, 1989년, 73~75쪽.

53) 임무택, 『4·19혁명-1970년 중앙본부』, 앞의 책, 244~246쪽 (원 자료-『4·19革命-1970年中央本部』 『韓國靑年新聞』, 제65호).

54) 재일한국청년동맹 중앙본부 상임위원회, 『1975년 동맹운동 총괄』, 『선구』 제3호, 1975년 12월, 5쪽.

55) 한동철, 『한청동의 20년의 발걸음-70년대를 중심으로』, 『계간 통일로』 제28호, 재일한국청년동맹, 1980년 12월, 112쪽.

운동과 재일조선인의 문제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하고, 행동하고, 점검하는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다.⁵⁶⁾

두 번째로 “건국·귀국”사상을 보자. “건국·귀국”사상은 서승이 제시한 ‘적극적 민족주의’라는 개념에 바탕을 둔 것으로 한청의 한국민주화운동과 조국통일운동의 근간이 되는 사상으로 한청 위원장인 김군부金君夫에 의해 1976년에 제시된 것이다.⁵⁷⁾ 한청은 조직활동을 통해서 조국의 언어나 문화 등을 적극적으로 익히게 되었고, 그를 통해 얻은 민족성에 근거해 한국민주화운동의 궁극적인 목표인 조국통일에서 일익을 담당하는 주체적인 존재가 되려고 했는데, 이는 민족적으로 사는 길이기도 했다. 한청의 김군부는 민족적으로 살려는 의지와 서승의 ‘적극적 민족주의’를 결합해 ‘건국·귀국사상’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적극적 민족주의”는 한국에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1971년에 박정희 정권이 조작한 ‘학원침투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되어 정치범이 된 재일조선인인 서승이 제시한 개념이다. 서승은 재일조선인이 민족차별을 받아 인식되는 민족주의는 부負의 성격을 갖고 있는 소극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교포는 한국인으로서의 의식을 갖고는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초적인 것에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민족의식을 자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민족의식이란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자국의 문화, 역사, 전통, 언어, 그 외의 모든 것을 깊이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것들을 사랑하고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풍요한 통일된 세계에 자랑할 만한 조국을 갖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전소 민족적인 일체감을 확고히 하고 유대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라고 ‘적극적 민족주의’를 정의했다. 또한 조국의 ‘분단’은 민족의 ‘분단’으로 이어지며, 이는 재일조선인사회가 조국에 대한 확고한 이미지를 갖는 것을 곤란하게 한다고 지적했다.⁵⁸⁾

56) 재일한국청년동맹 중앙본부 상임위원회, 『1975년 동맹운동 총괄』, 앞의 주.

57) 1976년 2월 14~16일까지 3일에 걸쳐 개최된 제12회 한청 전국동계강습회에서 김군부가 제시했다 (『民族統一を早めよ』, 『民族時報縮刷版』, 1976년 2월 21일자(5면), 391쪽).

58) 서군 형제를 구하는 회 편, 『서군 형제를 구하기 위하여-제1분책』(徐君兄弟を救う会編, 『徐君兄弟を救うために-第1分冊』), 影書房, 1992, 166쪽.

즉, 서승은 자국의 언어나 문화 등을 익히려는 적극적인 민족의식을 토대로 조국통일을 위해 민족적인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적극적 민족주의를 확립시킨다고 인식했다.⁵⁹⁾ 그에게 사랑할 만한 조국은 통일된 조국이며, 조국통일을 위해 한국의 민주화는 이루어야 할 과제였던 것이다.⁶⁰⁾ 서승이 한국민주화운동에 참가하는 등 조국의 현실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려고 한 것은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둔 행동이었다. 그리고 이는 곧 민족적인 행위였던 것이다.

서승의 “적극적 민족주의”는 한청이 한국민주화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 하나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는데, 그럼 한청에게 “적극적 민족주의”란 어떠한 것이었을까. 김군부는 적극적 민족주의를 재일조선인 청년이 놓인 상황을 ‘제일’, 일본, 조국이라는 측면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며, 자신들이 놓여있는 상황을 분석하는 것으로 조국이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다.⁶¹⁾ 즉 자신들이 놓여있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분석해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정하고, 또 그러한 삶의 방식은 조국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다. 김군부는 “적극적 민족주의”와 “건국·귀국사상”이 목표로 하는 것이 같다고 보고 있었다.

그럼 진정한 적극적인 민족의식이란 무엇인가. 그는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자국의 문화, 역사, 전통, 언어, 그 외의 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것들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실제로 통일된 조국을 갖는 것, 세 번째로 전소 민족적인 삶을 확고하게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한청동이 과거 16년 동안 엄청난 피투성이의 싸움에서 쟁취 한 하나의 사상, 애국주의에 의거한 건국귀국 사상과 일치하는 것입니다.⁶²⁾

59) 졸론, 『한국민주화운동 참가로 보는 재일조선인의 정체성-민단계 재일조선인을 중심으로』, 『언어·지역문화연구』 (『韓國民主化運動への参加に見る在日朝鮮人のアイデンティティ-民団系在日朝鮮人を中心に』, 『言語・地域文化研究』), 제17호, 2011년 3월, 도쿄외국어대학대학원 박사후기과정 논총, 20쪽.

60) 졸론, 『한국민주화운동 참가로 보는 재일조선인의 정체성-민단계 재일조선인을 중심으로』, 앞의 주, 20쪽.

61) 김군부, 『재일한국청년의 해방의 길』, 『선구』 (金君夫『在日韓國青年の解放の道』, 『先駆』), 제17호, 한청출판사, 1977년 8월, 72쪽.

62) 위의 주, 73쪽.

그리고 적극적 민족주의 입장에서 “건국귀국의 길”을 사는 것이 제일조선인 2·3세의 삶의 방식이며 그것을 조직이 대중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한청의 운동이라고 했다.⁶³⁾ “건국귀국의 길”이란 “제일한국인”이 민족 주체성을 갖고 살 수 있으며, 통일되고 독립된 건전한 조국을 세우는 것으로 미래가 열리고 자유의지로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다.⁶⁴⁾ 김군부는 이러한 생각을 “건국·귀국사상”이라고 정의하고,⁶⁵⁾ “자신의 손으로 건강한 조국을 세우고, 그 나라에 영원히 귀의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⁶⁶⁾

나이가 김군부는 1977년 3월 6일에 열린 ‘3·6 전국교류집회’에서 제일조선인 2·3세가 적극적인 민족주의 입장에서 “건국·귀국사상”을 갖고 민주화운동세력과 ‘연대’해 한국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제일조선인 청년의 인간적인 해방의 길이 된다고 주장했다.⁶⁷⁾ 그의 주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의 한청은 제일조선인 청년이 일본사회에서 여러 차별로 인해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정당하고 있다고 인식했고, 제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을 바로잡는 것과 민족성을 되찾는 것을 통해 인간적인 삶을 모색하고, 나아가서는 한국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것으로 제일조선인 청년의 미래가 열린다고 인식했다는 것이다.⁶⁸⁾

이러한 인식에 근거해 전개한 또 하나의 운동이 권리획득운동이다. 한청은 권리획득운동이 제일조선인 2·3세 청년이 민족의식을 각성하게 하고, 민족적인 주체성 확립을 제기하며, 또한 권리의식을 고양시킨다고 평가했다.⁶⁹⁾

63) 위의 주, 72~73쪽.

64) 「3·6 전국교류집회-제일한국인청년의 빛나는 미래는 한국의 민주화와 조국통일 안에서」, 『선구』 (『3·6 全国交流集会-在日韓国人青年の輝かしい未来は韓国の民主化と祖国統一の中に』, 『先驅』, 제13호, 제일한 국청년동맹 중앙본부 상임위원회, 1977년 4월, 36쪽.

65) ‘건국·귀국사상’은 『先驅』에서는 때때로 ‘귀국·건국사상’으로 혼용되고 있었다. 단 김군부는 ‘건국·귀국 사상’이라는 명칭을 제안한 당사자이며, 또한 이 명칭들에 담겨있는 주장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김군부가 사용하는 명칭을 우선으로 한다(김군부, 『제일한국청년의 해방의 길』, 앞의 주, 73쪽).

66) 김군부, 『적극적 민족주의와 제일한국인청년』, 『선구』 (金君夫『積極的民族主義と在日韓国人青年』, 제9호, 제일한국청년동맹 중앙본부 상임위원회, 1976년 11월, 43쪽.

67) 「3·6全国交流集会-在日韓国人青年の輝かしい未来は、韓国の民主化と祖国統一の中に」, 앞의 주.

68) 위의 주.

69) 위의 주, 35쪽.

이는 차별에 의해 민족성을 자각하는 소극적 민족주의와는 다르게 차별과 싸우는 것으로 민족성을 자각한다는 논리로,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획득된 민족성은 조국에 영향력을 미치는 “건국·귀국사상”으로 연결된다고 말할 수 있다.⁷⁰⁾

차별에 맞서 싸우는 것을 민족성을 획득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한 것은 한청만의 논리가 아니라 재일조선인 청년단체에서 널리 보이는 것이었다. 재일조선인 2·3세가 많이 참가한 와세다대학 한국문화연구회(한문연)는 한국민주화운동에 참가하는 것은 일본에서의 권리획득운동의 연장선에 있는 민족운동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한일조약에 의해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가 정해지고, 일본 정부의 비민주적이고 차별적인 재일조선인 정책을 한국정부가 용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당시의 재일조선인 청년들은 일본 내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한국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즉, 한국의 기민화 정책과 일본의 재일조선인 차별이 모든 재일조선인 문제의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민화 정책을 취하고 있는 박 정권을 상대로 투쟁하는 것과 일본의 민족차별과 싸우는 것은 민족운동으로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었다. 즉 박정권의 독재 하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한국 민중과 일본에서 민족차별을 겪고 있는 재일조선인의 상황은 민족이 놓여있는 부조리라는 의미에서 같은 상황이었다.

모든 전 민족적 정치과제에 당면했을 때 권익옹호투쟁 그 자체가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본국 구조의 모순이 육박함으로 인해 민족사에 참여한다는 원칙이 보다 첨예하게 표현된 형태가 본국 민주화 지원 투쟁이며, 그 의미에서 권익옹호투쟁의 일환이다.⁷¹⁾

70) 졸론, 『한국민주화운동 참가로 보는 재일조선인의 정체성-민단계 재일조선인을 중심으로』, 앞의 주, 21쪽.

71) 원문은 다음과 같다. “諸々の全民族的政治課題に当りし際、權益擁護闘争そのものが内在的に有する本国構造矛盾肉迫による民族史参与という原則がより先鋭的に表現された形が本国民民主化支援闘争であり、その意味で權益擁護闘争の一環である”(와세다대학 한국문화연구소, 『재일민족민주운동』)

와세다 한문연은 일본의 차별에는 ‘일상적인 생활에 내포되어있는 유형무형의 부당한 규정이 국부적, 개별적인 모순만이 아니라 분단이라는 본질적인 모순과 본국 사회의 모든 문제가 총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⁷²⁾고도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민주화운동과 권리획득운동은 동일선상에서 추진해야 하는 운동으로 받아들여졌다.

박종석에 대한 히타치 취직차별 문제에 대한 투쟁단체인 ‘박 군을 둘러싼 회’에서 활동했던 최승구는 한국민주화운동과 권리획득운동을 동일선상에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권리획득운동이 민족운동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민족적인 자각과 기본적인 권리에 눈뜨는 것은 표리일체이며, 권리에 눈 떠 투쟁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자부심과 존엄에 눈뜨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것은 제일조선인의 상황에서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도 말했다.⁷³⁾

3)한청에 대한 탄압

한청을 포함한 민단체 제일조선인의 한국민주화운동은 박정희 정권에 달갑지 않은 것이었다. 한국 정부가 민단체 제일조선인의 한국민주화운동을 견제할 때에 8·13사건⁷⁴⁾처럼 민단과 민단 산하 청년회를 통해 집회나 대회 등을 직접 방해하는 방법이 동원됐다. 또한 한국 내에서는 문세광사건,⁷⁵⁾ 윤희동 간첩사건 등과 같이 한민통과 관련된 사건이 연이어 발표되었다. 문세

투쟁사」(『在日民族民主 運動闘争史』, 『高麗』, 제11호, 1971년 12월, 110쪽).

72) 위의 주, 100쪽.

73) 박 군을 둘러싼 모임 편 『좌담회』 히타치 규탄으로의 발걸음, 『민족차별 히타치 취직차별 규탄』(朴 君を囲む会編, 『座談会』日立糾弾へのあゆみ, 『民族差別日立就職差別糾弾』, 亜紀書房, 1974, 54쪽.

74) 8·13사건은 일본, 미국, 서독 등의 지역에서 한국민주화운동을 개별적으로 전개하고 있었던 민단체 제일 조선인과 해외‘한국인’이 한국민주화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연합단체 조직을 위해 1977년 8월 13일에 개최한 ‘해외한국인 민주운동 대표자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민단의 산하단체인 ‘제일 본 대한민국 청년회’(이하, 한국청년회) 소속의 청년 약 300명과 일본 극우단체인 ‘국제승공연합’ 소속의 청년들이 회의장인 우에노의 이케노하타 문화센터(上野、池之端文化センター)에 난입해 폭력사태를 일으킨 사건이다.

75) 문세광 사건은 1974년 8월 15일에 제일조선인 청년인 문세광이 박정희 사살을 시도하던 중에 유탄에 의해 퍼스트레이디인 육영수를 사망케 한 사건이다.

광은 한 때 한청 멤버로 활동했고, 윤희동은 민단 이바라키茨城 본부의 간부로 배동호와 함께 조국통일운동을 위한 조직인 ‘민족통일협의회’를 결성한 인물이었다. 또한 중앙정보부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체포된 일본인 타치카와 마사키太刀川正樹 등이 한민통과 연결되어 있다고 발표했다.⁷⁶⁾ 이들 사건은 한민통과 한청이 북한·총련과 관련이 있다는 이미지를 생산했고, 한청, 한민통 등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불순세력”이라는 이미지를 공고히 했다. 또한 박 정권은 민단계 재일조선인이 연루된 사건들을 한국 내의 민주화세력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데 이용했다. 결국 한민통과 한청의 한국민주화운동을 더 반공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했다.

한국 내의 한민통 및 한청 관련 ‘간첩사건’으로 인해 일본 경찰 권력으로 부터 직접적으로 ‘압력’을 받는 경우가 생겼다. 1974년 8월에 발생한 문세광 사건의 당사자인 문세광이 전 한청 멤버였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는 한청에 대한 비난이 거세졌다. 나아가 한국 외무위원회(이하, 외무위)는 같은 해 8월 28일에 ‘5개 항목 대일 경고문’을 채택했는데, 그 내용의 일부에 한국정부가 “조총련과 그 전위부대인 한청을 당장 해체할 것”과 “일본 내의 반한국적인 활동을 제도적으로 규제할 것을 일본에 촉구할 것” 등이 들어있었다.⁷⁷⁾ 이에 대해 한청은 외무위에 대해서는 일본에 한청에 대한 탄압을 요청하는 반민족적인 행위라고 비판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자신들을 총련의 전위대로 단정 짓는 것은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려는 구실이라고 비판했다.⁷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제 일본 오사카부大阪府 경찰은 한청 사무소와 한청 위원장인 김군부의 자택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그 외에도 한국대사관 앞에서 한청에 대한 ‘탄압’에 항의하기 위해 모인 한청 멤버를 체포하는 등 한청에 압력을 가했다. 1977년 4월 17일에 한국대사관 앞에서 항의활동

76) 타치카와 마사키太刀川正樹와 하야카와 요시하루早川嘉治는 한민통에서 활동하는 광둥의로부터 북한의 자금을 건네받아 민청학련에 전달한 혐의로 체포됐다. 하지만 이들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간첩혐의’ 일본기자 36년 만에 무죄』, 2010년 10월 29일자(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46112.html), 그리고 『민청학련’ 첫 국가배상 판결』, 2013년 6월 19일자(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46112.html). 이상 『한겨레신문』.

77) 『日서 無誠意하게 나오면 斷交 등 强硬措置 취하라』, 『東亞日報』, 1974년 8월 28일자, 1면

78) 『同盟誹謗許せない-規制策動に韓青反駁声明』, 『民族時報縮刷版』, 1974년 9월 1일付(1面)、213頁.

을 한 한청 홋카이도본부의 멤버인 박경성을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등의 죄로 체포한 것이다. 이후 80년대에 들어서도 한청 사무실과 멤버를 상대로 한 가택수사가 있었다.⁷⁹⁾

한청에 대한 일본 경찰의 탄압이 1974년 한국 외무위가 발표한 ‘5개 항목 대일 경고문’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70년대 후반부터 일본 경찰의 한청에 대한 견제를 한국 정부나 민단이 좌시하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한민통과 한청의 활동을 경계·견제하고 있던 한국 정부나 민단에게 한청에 대한 일본 경찰의 탄압은 유리한 상황이었음에 틀림없었을 것이다.

4. 나오며

한청은 이승만 정권의 반공정책의 일환으로 조직된 대한청년단의 후신으로 한국 정부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5·16군사쿠데타 반대와 민단민주화운동 등을 계기로 반정부, 반민단 입장으로 돌아서고 결국에 민단의 산하단체를 취소당해 민단에서 배제되었다. 이후 70년대에 한민통의 구성단체로 한국민주화운동을 전개했으며, 80년대에 들어서 한민통의 조직이 약화되면서 조직 역량을 확대하며 민단계 재일조선인의 한국민주화운동을 주도했다.

이는 한청 조직의 자신감 증대로 이어져 1987년 6월에 민주화가 ‘달성’된 후에는 급변하는 한국 정세에 제3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했다. 한청의 중앙조직부장이었던 진귀성愼貴晟은 같은 해 8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린 제22회 전국 하기강습회에서 “국내 민주화운동 발전에 참여하기 위한 동맹운동·조직 개혁과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한 강연에서 동맹운동이 “지원 단계에서 참여의 시기”에 있다고 주장하고 한국 정세 변화에

79) 1984년 7월 17일 오사카본부, 1986년 도쿄 가츠시카葛飾 지부가 가택수사를 당했다. 또한 1987년 6월 30 일에 한청 오사카본부 위원장인 김창오가, 그리고 같은 달 한청 사무소와 멤버가 가택수색을 당했다.

맞춰 조직 개혁과 발전을 위해 행동할 것을 주장했다.⁸⁰⁾ 그리고 1989년 들어 한국에서 통일운동이 고양되자 한청도 통일운동에 주력하게 되었고 같은 해에 조직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이 북한, 해외 ‘한국인’에게 제안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가 다음해 8월 15일에 판문점에서 처음 열리자 한청은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하는 등 한국의 통일단체 등과 협력하며 조국통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이후의 한청의 조직과 활동은 축소되어 현재 한청은 70년대에 13개였던 지방본부가 8개로 줄어들었고,⁸¹⁾ 한국이 ‘민주화’되고 조국통일운동도 약화되면서 활동의 폭 또한 축소되었다. 한반도의 통일 관련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그와 관련된 활동은 미미하다. 대신 재일조선인 청년들에게 조국과 민족에 대해 학습하고 같은 민족인 청년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 즉 재일조선인 청년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된 활동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민단민주화운동과 한국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한청에 덧씌워진 “불순분자”라는 이미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 이유는 한민통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⁸²⁾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1978년 재일조선인정치범 관련 재판에서 서울대법원은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는데, 이 규정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는 한국에서 아직도 한민통을 비롯한 한국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민단계재일조선인과 그 단체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못하는 원인이며, 해외의 한국민주화운동에 대한 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가는 상황에서도 한민통을 비롯한 민단계재일조선인 단체의 운동을 연구하는 데에 아직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 한민통과 관련된 간첩사건의 당사자들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인정받고 있어 한민통에 대해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한민통에 대한 재평가는 자연히 한청과

80) 『한청동 전국통일 하기강습회 개최-문화발표 등에 참가자 감동』, 『민족시보 축쇄판』(『韓靑同全國統一夏季講習會開催-文化発表などに参加者感動』, 『民族時報縮刷版』), 1987년 8월 11일, 3쪽.

81) 8개의 지방본부는 도쿄, 가나가와, 아이치, 미에, 교토, 오사카, 효고, 히로시마 지방본부이다.

82) 1978년 6월 19일에 재일조선인정치범인 김정사 결심재판이 서울 대법원에서 열렸는데 이 재판에서 한민통은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었다.

그 운동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진다. 한청을 포함한 민단계 제일조선인 운동에 대한 재평가는 한국민주화운동사와 제일조선인운동사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한청의 한국민주화운동을 통사적으로 서술하는데 중점을 두어 더 깊은 분석이나 한청 멤버들의 증언을 담지 못했으나 이후의 연구 과제로 삼고 싶다.

■ 참고문헌

1. 한국어

- 민단 30년사 편찬위원회, 『민단 30년사』,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1977.
- 민단 50년사 편찬위원회, 『민단 50년사』, 재일본대한민국민단, 1997.
- 『民團간부초청教育』, 『京郷新聞』, 1971년 11월 22일.
- 이경남, 『青年運動半世紀(55) - 大韓青年團[1] 이대통령 親衛隊로 『統솔깃발』』, 『京郷新聞』, 1987년 12월 2일.
- 『日서 無誠意하게 나오면 斷交등 強硬措置 취하라』, 『東亞日報』, 1974년 8월 28일.
- 『재일동포 그 격동의 현주소<4>민족학교』, 『한겨레신문』, 1993년 6월 1일.
- 『韓行行動綱領 李總裁가 指示』, 『東亞日報』, 1949년 4월 12일.

김선주·강석승 편저, 『4월 학생민주혁명』, 지식과 교양, 2013.

박세길, 『다시쓰는 한국현대사2 - 증전부터 10·26까지』, 돌베개, 1989.

후지이 다케시,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 - 족칭계의 형성과 몰락을 통해 본 해방 8년사』, 역사비평사, 2012.

2. 일본어

- 李明子, 『チノギの想いで』, 『季刊統一路』第28号, 韓青出版社, 1980년 12월.
- 林潤淑, 『私なりの10年の歩み』, 『季刊統一路』第28号, 韓青出版社, 1980년 12월.
- 伊健次, 『日韓條約の締結と総連・民團の対立、そして在日二世の葛藤』, 『人文学研究所報』 Vol 53, 神奈川大学人文学研究所, 2015년 3월.
- 『大阪府警韓青大阪本部に乱入 - 不当創作、生野北支部にも』, 『民族時報』, 1984년 7월 21일付.
- 金君夫, 『在日韓國青年の解放の道』, 『先驅』第17号, 韓青出版社, 1977년 8월.
- 金君夫, 『積極的民族主義と在日韓國人青年』, 『先驅』第9号, 在日韓國青年同盟中央本部常任委員會, 1976년 11월.
- 金富子, 『「人間」になろうとする試みのなかで』, 『季刊統一路』第28号, 韓青出版社, 1980년 12월.
- 『警察当局、韓國民主化運動に悪らつな弾圧韓青同大阪委員長を不当逮捕 - 韓青同大阪本部と強 制捜査』, 『民族時報』, 1987년 7월 1일 7월 1일.
- 『3·6全国交流集会 - 在日韓國人青年の輝かしい未来は韓國の民主化と祖国統一の中に』, 『先驅』第13号, 在日韓國青年同盟中央本部常任委員會, 1977년 4월.
- 早稻田大学韓國文化研究会, 『在日民族民主運動闘争史』, 『高麗』第11号, 1971년 12월.
- 座談会『60年代韓青同を語る』, 『季刊統一路』第28号, 在日韓國青年同盟, 1980년 12월.
- 『指紋拒否裁判初公判、開かる - 韓基徳君堂々と陳述』, 『民族時報』, 1984년 3월 11일付.
- 『「申京煥君を支える会」の記録 - 協定永取得者初めての「強制送還」との闘い』, 『むくげ通信』第 265号, 2014년 7월 27日.
- 『一九七五年同盟運動総括』, 『先驅』第3号, 在日韓國青年同盟中央本部常任委員, 1975년 12월.
- 徐京植, 『半難民の位置から - 戦後責任論争と在日朝鮮人』, 影書房, 2002년.

趙基銀, 『在日朝鮮人と1970年代の韓国民主化運動』, 『言語・地域文化研究』第12号, 東京外国語大学大学院
博士後期課程論叢, 2006年 3月.

趙基銀, 『韓国民主化運動への参加に見る在日朝鮮人のアイデンティティ- 民団系在日朝鮮人を中心に』,
『言語・地域文化研究』第17号, 2011年 3月.

『特集・韓青の20年の歩み』, 『統一路』第28号, 在日朝鮮人青年同盟, 1980年 12月.

崔崇浩, 『青年論壇- 「4・19と私」』, 『民族時報』, 1985年 4月 11日付.

『韓青- 韓国労働者・学生支援1日10円カンパ運動』, 『民族時報縮刷版』, 1982年 2月 15日付.

『韓青同全国統一夏季講習会開催- 文化発表などに参加者感動』, 『民族時報縮刷版』, 1987年 8月 11日付.

『韓青が文化祭』, 『民族時報縮刷版』, 1977年 5月 21日付.

『韓青が連続集会』, 『民族時報縮刷版』, 1980年 7月 15日付.

『韓民統一 韓青同外登法改正を要請』, 『民族時報』, 1985年 2月 21日付.

韓東哲, 『韓青同二十年の歩み- 70年代を中心に』, 『季刊統一路』第28号, 在日韓国青年同盟, 1980年 12月.

『反独裁闘争は勝利段階に』, 『民族時報縮刷版』, 1976年 12月 15日付.

『日立、民族差別に謝罪- 朴君の採用内定取消を撤回』, 『民族時報縮刷版』, 1974年 6月 1日付.

『本国労働者支援青年委設置決定- 韓青全国熱性者会議』, 『民族時報縮刷版』, 1981年 9月 21日付.

『民団あいち60年史』, <http://mindan-aichi.org/test/60nensi/3-2.pdf>(2014년 7월 20일 열람).

『民族統一を早めよ』, 『民族時報縮刷版』, 1976年 2月 21日付.

『韓青韓学同による法的地位要求貫徹中央決起大会の経緯ならびに中央執行委員会の措置案』, 『韓国新聞縮
刷版- 1964~1969年度』, 在日本大韓民国居留民団, 1965年 3月 1日.

金佳秀, 『我が青春グラフィティ② <激闘編>- 「愛知韓青の精神はいまも胸で光る」』, 『アプロ21』, 第5月号,
1997年5月.

在日韓国青年同盟, 『在日韓国青年同盟結成50周年記念式』, 2010年 12月.

姜徹, 『在日朝鮮人の人権と日本の法律』(第三版), 雄山閣, 2006年.

朴君を囲む会編, 『<座談会>日立糾弾へのあゆみ』, 『民族差別日立就職差別糾弾』, 亜紀書房, 1974年.

林茂澤, 『在日韓国青年同盟の歴史- 1960年代から80年まで』, 新幹社, 2011年.

徐君兄弟を救う会編, 『徐君兄弟を救うために- 第1分冊』, 影書房, 1992年.

鄭哲, 『民団今昔- 在日韓国人の民主化運動』, 啓衆新社, 1982年.

福岡安則, 『在日韓国・在日朝鮮人- 若い世代のアイデンティティ』, 中公新書, 1993年.

民団系在日朝鮮人の韓国民主化運動 －在日韓国青年同盟を中心に

趙基銀*

「在日韓国青年同盟」(韓青)は元来民団傘下団体であって、その母体は李承晩政權が「反共」の砦として組織した「大韓青年団」である。そのため、結成当初から韓国政府の統制がかかった団体である。しかし、4・19革命と5・16軍事クーデターを経る過程で民団内の抵抗勢力と成長した。特に、5・16軍事クーデターを支持していた民団執行部は韓国政府に追従しており、これに対し抵抗するグループが現れた。彼らは民団を統制する韓国政府に対し主体的であることを要求する民団民主化運動を展開した。韓青は、その抵抗勢力が結成した「民団正常化有志懇談会」の「実質的な事務局」として活動しながら民団民主化運動に参加した。同時に、韓青は法的地位および外国人学校法案反対運動を展開していたため、民団執行部や韓国政府と対立していた。ついに、1972年韓青は民団傘下団体を取消され民団から排除された。

同年、南北共同声明が発表されると、民団民主化運動勢力である元民団幹部らとともに南北共同声明を支持する運動を展開した。しかし、韓国政府が維新体制に入ってから祖国統一に対する期待が崩れてしまった。しかし、当時日本に滞在していた金大中の講演から影響を受け韓国民主化運動に目を向けるようになった。韓青は、民団民主化運動勢力と金大中が「連帯」して結成した韓国民主化運動のための組織である「韓国民主回復統一促進国民会議日本本部」(韓民統)のメンバーとして活動した。

以後、韓青は独自の運動を展開しながら、韓民統の「行動隊」として韓民統の韓国民主化運動を支えた。韓青は、4・19革命の精神に基づいて活動し

* 東京外国語大学海外時事情研究所、特別研究員

たが、主に労働者と在日朝鮮人政治犯の支援運動を中心に活動した。また、80年代に入ってから弱体化した韓民統を支えながら韓民統の運動の実践的な部分を多く担うようになった。そして、韓青は70年代に入って個人レベルの権利獲得運動への支持・支援をも積極的に行った。

韓青は、元在日朝鮮人政治犯の徐勝が提起した『積極的民族主義』を發展させ祖国に働きかける主体的な存在になろうとする意志を込めた『建国・帰国思想』に基づいて運動を展開した。そのため、韓青は祖国の文化に接することができる文化活動を通じて韓国民主化運動を展開した。また、そのために祖国の文化や歴史、韓国の政治・社会に関する学習そしてウリマル(朝鮮語)学習などを行った。

以上のような韓青の活動に対し韓国政府は警戒し、けん制した。また、日本政府は公権力をもって韓青を弾圧した。このような状況においても、韓青は運動の過程で生まれてきた組織としての自信に基づいて韓国情勢の変化に合わせて積極的に行動し、その一環となるのが『民主化』の達成後の祖国統一運動への参加である。

キーワード：在日朝鮮人、韓国民主化運動、在日韓国青年同盟、民団民主化運動、反共